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홍무

## 이슈진단

최저임금 인상 건설업계 영향  
건설업 고용 관련 지표 하락의 원인  
세계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6.28 건설산업 혁신방안'



## 발간물안내

연구보고서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  
(Construction 4.0)의 비전과 전략  
연구보고서 -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건설정책저널 - 북한 건설 · 부동산 특집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지금의 큰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삼아 도약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흥무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흥무입니다.

2018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유례없는 뜨거운 폭염과 열대야가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전문건설인들의 뜨거운 열정이라면 이 더위를 충분히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SOC예산 축소,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민간 건축주택 경기 침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악재들이 업계 존립을 위협할 문제들로 이어져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문건설업 업역보호를 통한 회원사 일감창출, 회원사 소양교육 강화를 통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유익함을 주는 협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조달청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과 국회, 정부에 건설인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메인 슬로건이 “안전한 대한민국, 적정공사비에서 시작됩니다.” 였습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고용노동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1.90%로 전체 산업 평균 1.05%보다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먼저 적정공사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성있는 낙찰율 상향 조정 및 계약제도의 개선, 현장실태 및 현실을 반영한 설계 단가 산정, 원·하도급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수평적 구조로의 개선, 발주처의 공사목적물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업역에 맞는 적법한 발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과 같이 지금의 큰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중앙회장님을 중심으로 시·도회장과 업종별 협의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계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시공에만 매진하고 우리업계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여름 무더위가 물러날때쯤이면 우리 건설업계를 뜨겁게 했던 문제들도 깨끗이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에 황금빛 결실을 맺는 농촌의 풍요로움처럼 우리 건설업계에도 희망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건설업계 영향

박 광 배 연구위원 (jwjb2021@ricon.re.kr)

건설업은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에 관련된 정책은 직접적으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 정책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월소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건설업에 파급되는 효과가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원가상승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업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숙식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의 형태로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비용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오지의 현장이나 사회기반시설(SOC) 공사현장에 우선 배정된다. 이들 현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과 식당 및 편의시설 등을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건설업자 측면에서는 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업종에서는 추가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비용 발생이 있다. 이미 건설업자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보다 발생하는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건설업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 건설업 고용 관련 지표 하락의 원인

박 광 배 연구위원 (jwjb2021@ricon.re.kr)

건설업은 노동의존도가 강한 생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산출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표준화된 양산체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정책에서 건설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향후 건설업도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건설업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고용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업은 계약 이행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건설투자는 계약의 후행결과라고 할 수 있고, 투자에 따라 고용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고용지표 하락은 과거 2~3년간 유지되었던 건설 호황국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

후 건설투자의 전제가 되는 계약액이 2016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생산기간은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건설투자는 과거 2년 전 체결된 계약의 결과이다. 2016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자로 인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주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건설업 종사자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도 건설업에서 고용지표가 정체되는 이유를 주택공급 물량의 감소와 강우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우 등의 요인은 공사기간 구성상 실내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돼 큰 영향요인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주 부진에 따른 투자 감소가 고용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6.28 건설산업 혁신방안'

박승국 연구실장 (skpark@ricon.re.kr)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8일 '제9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산·학·연 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GDP 성장기여도가 39%(2017년)에 달할 정도로 우리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으로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SOC 투자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혁신의 부족, 생산구조의 경직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①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 ②업역 및 업종 개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③부실업체 퇴출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시장질서 혁신', ④해외 현장 훈련과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 확대 및 특급기술자의 주기적 의무교육을 통한 '일자리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구조 혁신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로 원도급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주로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상호 자유롭게 원도급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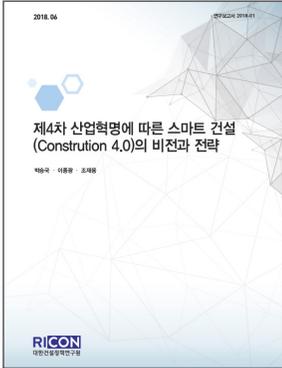
하도급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5종의 종합업종과 29종의 전문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체계를 업역규제 폐지와 연계하여 개편(예)10개 내외의 업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도급자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28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하나인 생산체계 개선은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산업의 유연성을 키우고 융복합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의 모습을 기대한다.

연구보고서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Construction 4.0)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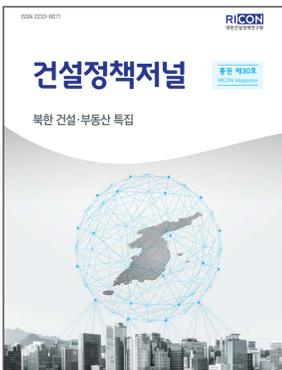
제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과 각종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모습으로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중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분야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혁신과 이로 인한 가치창출이 용이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 대응전략을 1)스마트 건설투자 동인 제시, 2)Living Lab 개념의 실증사업 추진, 3)융합기술의 경쟁력 강화, 3)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 지원으로 구분하여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건설산업의 스마트 건설역량이 배양 되길 기대합니다.

연구보고서 -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되는 등 배타적이고 경직된 현행 건설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 건설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와 유사한 건설환경을 갖는 일본의 건설생산 시스템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수평적인 건설업 구조 및 허가제도,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기준,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 건설업 성장 루트와 성장 가능한 생태계 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고착화된 국내 건설 생산시스템을 혁신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설정책저널(통권 제30호) - 북한 건설 · 부동산 특집



이번 호에는 1)김정은 시대의 북한,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 2)북한 건설수요의 주요 유형과 최우선 건설수요(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 3)남· 북한 경험 발전을 위한 건설분야의 정책 제언(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책임연구원), 4)유휴 건설기계 대북지원 검토(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경영금융연구실장), 5)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이용 실태와 개선방향(LH토지주택연구원 김미숙 북한연구센터장), 6)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 처리에 관한 입법방향(제주대학교 김성욱 교수)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정책저널이 남북 경험에 있어 건설분야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 제언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